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 민간부문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

권혜원

연구배경과 목적

-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 확대로 오늘날 고용관계는 파편화, 다변화
- '균열일터'로 인해 단일 사용자 범주가 해체되고 사용자 책임도 모호
- '균열'의 과정은 노동보호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
- 민간부문일수록 비용절감을 위한 임금경쟁과, 하청구조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열악해지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문제가 심각
-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의 심화에 맞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단체교섭 구조 확립을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이 중요
- 단체교섭 구조를 기업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간 임금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초기업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이나 업종 전체에 동질적 임금과 노동조건을 형성하여 임금경쟁을 억제해야 함
-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별 단체교섭 구조가 지배적이지만 초기업단체교섭 사례들이 존재
- 민간부문 초기업 단체교섭 사례들은 단속적 유동적 노동을 하는 임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 작은사업장 취약 노동자들에게 유효한 단체교섭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사례의 의의와 시사점을 탐색



해외사례 시사점: 미국 건설산업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의 업종 조직화와 단체교섭전략

- 미국도 분권화의 수준이 높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아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심함
- 건설산업이나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서 노동조합이 의미있는 단체교섭 전략을 추구
- 건설노조는 노동시장을 타이트하게 통제하며 조합원 확대에 소극적이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확대 전략과 초기업 교섭 전략을 연계, 지역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초기업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이 임금 하향화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함
- '가치 제안' 을 통해 유노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 노사의 공동이익과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 모델을 모색
- 복수사용자협약을 통해 노사 공동의 숙련훈련제도를 확립 및 강화
- SEIU는 청소 용역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지역단위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여 균일한 임금과 혜택구조를 확립: 구역별로 임금인상을 차등화하여 단계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고자 함
- 패턴교섭 전략과 초지역적 조정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수준을 상향 평준화
- 고비용 유노조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저단가 경쟁을 강화하려는 사용자의 경합(whipsawing) 전략에 맞서 임금과 노동 조건의 동질화를 추구하려면 초기업 단체교섭과 임금 조정 전략이 필요함을 입증

사례분석: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 교섭 당사자: 건설노조 산하 토목건축 분과위원회와 권역별 철근콘크리트협의회.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가 법정 사용자단체로 인정받은 후부터는 전국의 건설노조 지부장들이 사용자연합회와 중앙교섭을 진행
- 중앙교섭을 통해 형틀목수기능공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 다른 직종의 경우, 지역별 보충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하지만 사실상 형틀목수기능공 임금인상액이 유형을 확립(내용적으로는 표준협약)
- 2021 단체협약(안)의 경우 지역별 보충협약의 중복 내용들을 중앙협약안에 포함하여 포괄성을 확장

사례분석: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 단체교섭전개과정: 초기 현장 개별 교섭에서 지역별 교섭, 중앙통일교섭으로 이행
- 단속적 노동의 특성 때문에 사업장별 협약은 근로계약 종료되면 효력 상실
- 초기 지역별 단체교섭: 사용자도 지자체가 가진 행정력과 권한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과 개입을 요구(대구시가 앞장서서 사용자들을 교섭테이블에 나오게 하라고 요구)
- 2006년 이후 대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지역별 통일교섭의 틀이 마련
- 저임금 단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공사금액의 기준이 되는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원청의 공사비 지급, 공사기간 단축 관행을 제어해야 하며, 노사가 함께 건설산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인력 육성 등을 통해 산업혁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국단위 중앙교섭을 추진(최명숙, 2017)
- 전국단위 중앙교섭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섭 상대방 구성. 전문건설업체들도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급적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 → 2019년에는 서경인철콘 사용자 연합회가 법적 사용자단체성을 확보, 전국의 건설노조지부장들과 중앙통일교섭을 진행

2021 단체협약요구 사항



형틀 목수
기능공 일급기준
235,000원으로
1만원 인상



단체협약: 지역별 보충협약 유사한 조항을
중앙협약에 통합: 1장 총칙, 2장 노조활동,
3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5장후생복지
및 산업안전보건, 6장 교섭 신설 및 수정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근로시간 전국통일, 백신접종
유급휴가,협약의 구속력 조항 신설,
추가됨



시사점과 과제

- 형틀목수기능공의 정액인상안을 정해서 전국에 적용하고 타직 종의 경우 보충교섭을 통해 결정하므로 명실상부한 의미에서의 전국단위 표준협약은 아니지만 형틀목수기능공의 임금이 패턴 역할을 하여 상향조정.
- 임금경쟁과 지역별 편차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상액을 조정: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표준안 마련하여 균등한 임금조건을 마련, 표준임금협약을 통한 직종 내 높은 조정 효과
- 전국단위 초기업교섭 틀은 사용자들간 하향 임금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통해 토목건축 업종 내 동일한 임금과 노동 조건 형성의 기반을 확립

시사점과 과제

- 여전히 약 8.3%의 낮은 노조 조직률로 인해 단체협약 적용률도 낮은 한계가 존재
- 서울경기인천 사용자 단체가 전국수준에서 형성되어 전국의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중앙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틀로 발전시켜야 함
- 사용자들에게 교섭대표단체를 구성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지나친 비용을 소모하는 구조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초기업 교섭구조를 지원, 촉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
- 정부 지원금 수혜대상 선정시, 정부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참여 단위 결정시 노조법에 의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사용자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필요
- 초기업단체교섭 구조와 연계되어 노사공동의 기금조성 및 숙련향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가치제안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노사협력을 통한 산업발전 및 재활성화 모색 필요

사례분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초기업교섭 당사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제작가협회. 2015년부터는 (사)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공동으로 사측 교섭단 구성
- 2017년까지 초기업 단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
- 2018년부터는 제작사별 개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계로 전환, 분권화의 경로를 밟음
- 전환 이유: 제작가협회와 프로듀서조합의 회원사가 줄어들어 단체협약의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협소. 초기업협약이 실제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에게 대부분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
- 개별교섭으로 전환하였지만 노조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외부노동시장 전체를 규제하고자 하는 전략은 계속 추구

사례분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 근로표준계약서는 영화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19.10.30.일 마련되었습니다.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자(이하 '갑') (대표)와 근로자(이하 '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제작비 :

- 노조조직률과 사용자단체 조직률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효력도 대다수 제작현장을 포괄하지 못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한국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교섭과 협약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3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산업 전체에 표준적 노동기준을 확립하여 이와 같은 최저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초기업 단체협약과 사회협약을 통해 영화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표준근로계약서, 4대보험, 장시간 노동근절의 이행 수준 매우 높아 산업표준으로 확립됨
-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은 임금경쟁 억제, 내부 격차 해소라는 초기업단체교섭의 목표달성을 억제하지만, 그 해법이 분권화된 단체교섭구조일 수는 없음
- 지속가능한 초기업단체교섭 구조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조직률과 법적 교섭단체 구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 개별교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노사간 공동인식을 통해 초기업교섭구조를 부활함과 동시에 정부가 나서서 제작사들의 사용자단체 가입에 대한 유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화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업종별 교섭위원회를 통해 표준보수지침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 주도의 영화인공제회를 통해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고 초기업교섭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례분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주얼리지회



- 2018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주얼리지회 설립
- 출범초기부터 업종 지회로 출발하여 업종 조직화를 통한 공통의 문제해결을 모색
- 5인 미만, 10인 이하 작은 사업장들이 종로에 밀집. 최저노동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 2020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각선교섭 진행, 2021년부터는 집단교섭(업종별 공동교섭)

사례분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주얼리지회

-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보장, 야근수당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제기하여 업종 내 최저노동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2021년 다사용자 공동교섭구조에서도 지속가능한 주얼리 업종 발전방안, 기초노동 질서 확립 및 노사협력 방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주제로 공동 요구안을 확립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도심 주얼리 제조업의 작은 사업장들 내에서 노동기본권과 최저노동기준이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개별 노조의 이익보다는 공동 교섭 이익을 중시하며 업종 공동교섭의 틀을 확립
- 향후 노조 조직화의 과제와 더불어 난립하고 있는 법적 교섭 대표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사례분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주얼리지회

- 다사용자 교섭구조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통일교섭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함
- 초기업교섭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도시제조업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주얼리 업종 발전은 시정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므로, 서울시가 노사정협의회 거버넌스를 재활성화하면서 협의회 내에서 주얼리 표준적정임금 마련, 기본노동조건 표준안, 주얼리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 등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 대표의 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임금에 의한 복지안전망 확립도 시급하므로 노동조합 주도로 공제회를 조직하고, 초기업 단체교섭 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결론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주얼리지회
교섭형태	중앙 통일교섭 + 지역별 통일교섭	중앙통일교섭 (2018년부터 기업별 개별교섭으로 전환)	지역별 집단교섭
사용자	서울경인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 *지역별 교섭의 경우, 대전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철근 콘크리트 협의회	(사)한국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집단교섭에 참가하는 4개의 사업장
협약	임금협약 (형틀목수 기능공) + 단체협약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최저직급 최저시급과 일단위로 고용되는 인력의 최저임금만 정함	단체협약
적용대상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 권역별 철근협의회 소속 사업장	한국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단체교섭과 단체협 약체결권을 위임한 제작사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보충협약	있음 (중앙협약을 준거로 하며, 유연성 크지 않음)	있음	임금협약은 사업장 보충협약
협약유형	표준협약	최저기준협약	최저기준협약
효력	조합원	조합원	공동교섭 참가 사업장
과제	·조직을 제고를 통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초기업교섭구조 안정화와 정부의 지원 ·초기업교섭구조를 활용한 기능공양성 숙련향상 프로그램 ·정부의 사용자단체 구성 지원 및 촉진	·사용자단체의 조직을 제고를 통한 초기업교섭구조의 복원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표준보수지침 마련 ·정부의 사용자단체 구성 지원 및 촉진	·조직을 제고를 통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업종 공동교섭의 틀을 통일교섭 체계로 발전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내 도심제조업 주얼리업종 노사정 대화 기구 확립 ·정부와 지자체의 사용자 단체 구성 지원 및 촉진